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주 상 영**

I. 머리말

한국경제는 오랜 동안 공급/제조업/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펴왔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돌이켜보면 소규모의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펴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수와 분배 문제가 너무 소홀히 다루어졌고 이제는 성장도 한계에 봉착했다. 분배를 소홀히 하면서 지속성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에 대해 이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이 글의 목적은 지난 20여 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온 과정과 그 원인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데 있다. 전통적으로 소득분배 문제에 접근할 때 주로 가계조사 통계에 의존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할 경우에 가구특성 변수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본고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해 보자는 취지하에 거시경제변수들을 활용한다.

II.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 및 국제 비교

노동과 자본이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각각 얼마씩 가져가는가를 기능적 분배라고 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가정해 왔다. 사실 이런 가정은 이론적

* 이 글은 강신욱 외(2018),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제5장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joosy@konkuk.ac.kr).

논리보다는 20세기 초반 영국과 미국 등에서 발견된 경험적 안정성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또는 1980년대 초반부터 노동소득분배율의 구조적 하락 추세가 발견되는데, 이러한 하락 추세가 확인되자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확인되었지만, 이것이 경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현상인지 불명확했으나,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 본격화된 실증연구는 하락 추세의 구조성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피케티의 역사적 실증 연구는 이런 관심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피케티, 2014).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는 자영업소득의 처리 문제가 등장한다. 자영업으로 얻는 소득에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소득을 어떻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리하는가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조금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단순한 측정 방식 가운데 하나는, 자영업자의 소득(국민계정상의 OSPUE)이 법인부문에서와 같은 비율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리된다는 가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즉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법인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표 1>은 이 방식으로 구한 OECD 주요 20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여준다.

분석에 포함된 OECD 20개국의 노동소득분배율(평균)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 이전까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시 반등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60%대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영국을 제외하면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한국은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다 그 이후부터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경우 하락세가 눈에 떨 정도로 크며, 1996년과 비교하면 2016년에 10%p 가깝게 하락하여 비교 대상국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동안 독일에서 5.39%p, 프랑스에서 0.76%p 하락하였고, 일본(1996~2015년)과 미국(1998~2015년)에서는 각각 5.67%p, 3.76%p 하락하였다. 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46%p 상승하였는데, 2000년대 초반에 잠시 하락한 이후 상승추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원인에 대하여 자영업 비중이 높은 현실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으나, 위에서 측정한 것은 법인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므로 국제 비교에 무리가 없다. 자영업 비중, 즉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더라도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올라간 것이므로, 그 자체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할 이유는 없다. 자영업 비중이 더 높았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사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 <표 1>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평균에 비해 5%p 정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90조 원(2018년 기준) 정도의 막대한 액수이다. 즉 OECD 평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이 지금보다 90조 원 많아야 한다(자본소득은 그만큼 적어야 한다).

〈표 1〉 OECD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비교

(단위 : %, %p)

	1995	1996(B)	2000	2005	2010	2015(A')	2016(A)	A(A')-B
오스트리아	67.10	65.77	63.54	58.85	59.57	60.94	61.38	-4.39
벨기에	62.80	63.05	62.57	61.78	60.49	63.27	-	0.22
체코	56.76	57.65	55.91	57.09	59.66	58.03	-	0.38
덴마크	67.31	67.84	65.33	63.60	63.15	60.68	62.82	-5.02
핀란드	61.50	61.53	57.94	57.77	59.45	59.74	59.19	-2.34
프랑스	65.46	65.56	63.86	64.25	64.21	64.63	64.80	-0.76
독일	68.00	67.59	67.34	61.42	60.72	61.85	62.20	-5.39
그리스	51.87	52.21	55.05	58.80	61.95	55.28	-	3.07
헝가리	73.69	72.01	69.08	67.31	62.80	63.72	-	-8.29
이탈리아	56.34	56.25	54.80	55.16	57.30	57.84	56.79	0.54
일본	60.75	59.43	58.48	54.90	55.13	53.76	-	-5.67
한국	63.46	66.12	60.04	59.27	53.97	55.72	56.24	-9.88
네덜란드	63.52	62.95	62.85	61.77	59.89	60.45	61.45	-1.50
포르투갈	66.18	67.77	69.78	69.34	66.96	62.29	62.73	-5.05
슬로바키아	54.77	57.94	60.33	63.17	61.06	62.56	-	4.62
슬로베니아	74.04	73.02	70.36	69.12	69.87	70.36	-	-2.66
스웨덴	57.91	60.60	60.05	59.22	58.79	61.53	61.83	1.23
스위스	66.56	66.14	62.34	61.19	61.23	65.35	-	-0.78
영국	58.79	57.79	60.76	59.39	63.04	63.09	63.25	5.46
미국	-	-	68.60	65.85	63.89	63.79	-	-
OECD 평균 (20개국)	62.99	63.22	62.45	61.46	61.16	61.24	61.15	-2.38

주 : 1) 자영업자의 소득(OSPUE)이 법인부문에서와 같은 비율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리된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구한 노동소득분배율로, 결과적으로 법인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동일함.

2) OECD 국가 중에서 자료가 용이한 국가들만 계산.

자료 : OECD Stat, *National Accounts*, 2018년 1월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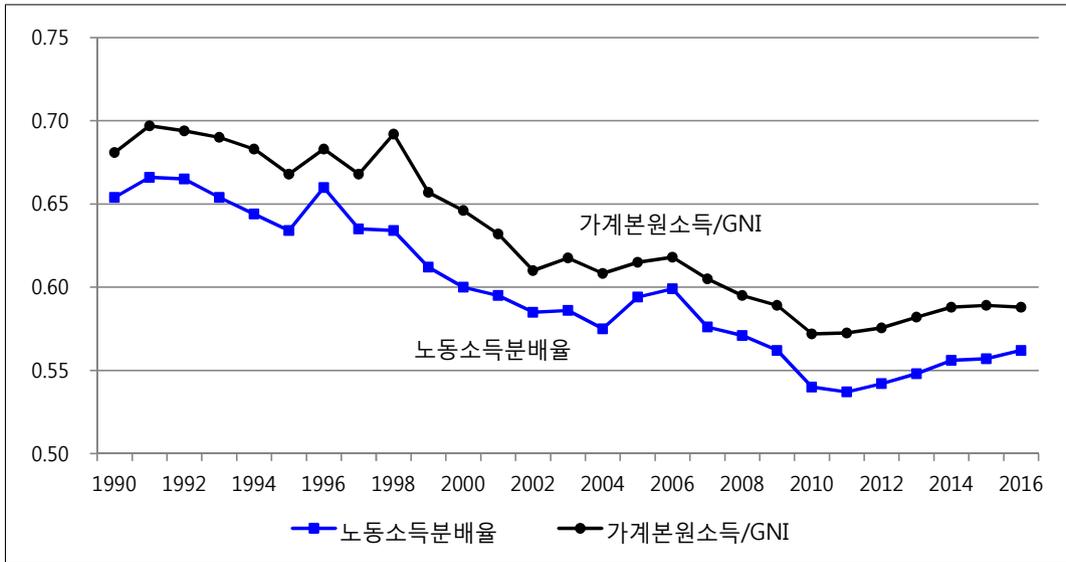
주요 선진국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과 이탈리아이다. 일본은 20년 넘게, 이탈리아는 10년 넘게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이다. 실제 노동소득분배율이 60%를 밑도는 국가는 많지 않은데, 그리스의 경우에 그 값이 낮은 점이 눈에 띈다. 노동소득분배율에 이론적 임계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 ‘저축-투자-소비’ 혹은 ‘총공급-총수요’의 선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¹⁾ 노동소득은 총수요의 원천이며, 미래 수요에 대한 전망이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고 자극한다. 노동소득을 비용으로만

1) 주상영(2013), 홍장표(2014) 등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그것이 내수침체의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준 바 있다.

취급하는 사고는 개별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경제 전체의 순환과정을 이해하려면 사고의 차원을 넓혀야 하는데, 1930년대 이후 거시경제학이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은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모든 사람이 기업가, 자본가, 임대사업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은 1990년 이후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와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보여준다. 국민소득을 생산요소 기준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경제주체에 따라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정부소득으로 구분하는 방식도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에 귀속되는 소득의 비중이므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는 조금 다르다. 가계소득에는 재산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와 같은 자본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림 1]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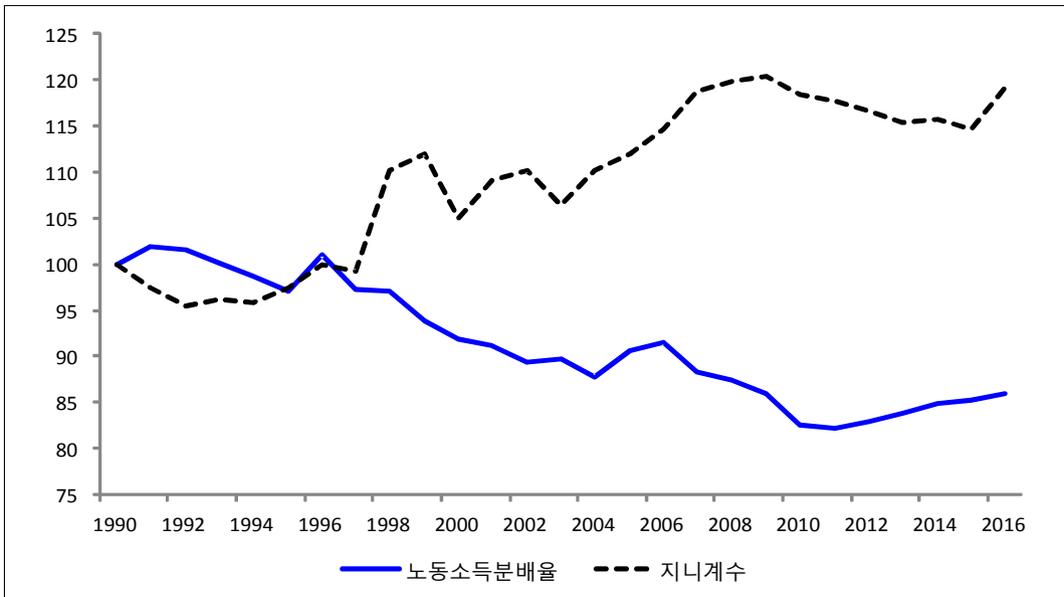
주 : 1) 노동소득분배율(보정B)=(피용자보수+OSPUE 보정분)/GVA
 2) GNI 대비 가계본원소득 비중.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가계소득분배율은 노동소득분배율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두 비율 모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 급격히 하락한다. 외환위기 이후 5~6년간 급속히 하락하였는데, 대량 해고, 임금 삭감, 기업(자영업 포함)의 구조조정과 파산 등이 하락 추세를 가속화시켰다. 두 비율은 그 후 몇 년간 안정화되는 듯했으나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2009~2010년 사이에 또 한 차례 급락한다. 최근 몇 년간 반등하였으나 2016년에는 반등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몇 년간 반등 추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에 불과한 정도이다.²⁾

사실 소득분배에 관한 지표는 다양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은 그 가운데 기능적 소득분배에 관한 지표이다. 그러면 계층별 소득분배에 관한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그림 2]는 1990년부터 이용 가능한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을 함께 보여준다. 시각적 비교를 위해 두 수치 모두 1990년을 100으로 놓고 전환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니계수는 추세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둘 간의 수학적 관계는 없으나, 기능적 분배의 악화와 가구소득 불평등이 함께 진행된 것이다.

[그림 2]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

(1990=기준연도)



주 : 모든 수치는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지표화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 본원소득 기준의 가계소득분배율은 2010~2011년까지 줄곧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속히 하락) 최근 몇 년간 반등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 가계본원소득/GNI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가계소득의 구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16년도에 피용자보수가 전년 대비 5.3% 증가한 반면 가계부문의 재산소득은 3.1%, 영업잉여는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즉 2016년도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은 가계의 자본소득 증가세가 미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소득의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Ⅲ. 소득분배지표 변동의 결정요인

기능적 분배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과 계층별 분배지표인 지니계수가 추세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더라도, 그 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장기적 추세의 결정요인과 단기적 변동의 결정요인 간에는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주요 (연간) 소득분배지표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분배지표로는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분배율(국민소득 대비 가계본원소득의 비율), 미시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을 사용하였다. 모든 경우에 1계 자기시차 변수를 포함하고, 설명변수로 는 노동관련 제도 변수, 경기와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표 2>에 의하면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비율에는 비정규직비율, 최저임금 등 노동관련 제도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비율이 낮을수록, 최저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분배율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경기가 변동하는 데 따라 이윤보다 임금의

<표 2> 주요 소득분배지표 변화의 결정요인(1990~2016년)

	종속변수 : 소득분배 지표					
	노동소득분배율		가계소득/GNI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수	0.097*** (0.014)	0.116*** (0.024)	0.090*** (0.022)	0.078*** (0.021)	0.186*** (0.049)	2.444*** (0.593)
AR(1)	0.892*** (0.031)	0.642*** (0.050)	0.926*** (0.038)	0.733*** (0.045)	0.563*** (0.115)	0.772*** (0.067)
비정규직 비율	-0.171*** (0.044)	-	-0.198*** (0.055)	-	-	-
최저임금 상승률	0.149*** (0.051)	-	0.104* (0.059)	-	-	-
경제성장률	-	-0.141*** (0.029)	-	-0.279*** (0.040)	-	-
△고용률	-	-	-	-	-0.326*** (0.101)	-12.248*** (2.396)
제조업 취업자비중	-	0.517*** (0.083)	-	0.513*** (0.072)	-3.520*** (0.084)	-6.278*** (1.524)
R ²	0.937	0.947	0.935	0.970	0.941	0.957

주 : 괄호 안은 Newey-West 표준오차.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이다. 해외경기 호전으로 수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능적 분배지표와 계층별 분배지표의 결정요인은 일치하지 않는데, 계층별 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에는 고용지표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에 비해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경우에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³⁾ 특징적인 것은 제조업 취업자 비중 변수가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다는 점이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과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가운데 제조업 활황이 호경기를 이끄는 경우에 계층별 분배가 다소 개선된다는 잠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흥미로운 것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의 상승이 계층별 분배지표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비율에도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치나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국가이다. 제조업 임금 수준이 중상위권에 속하는 현실에서 모든 소득분배지표가 제조업의 업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부분이 있다. 분석에 사용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라는 변수가 중간 및 중상위 임금 일자리의 대리변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적 기술진보의 흐름상 일자리 양극화가 진전되어 중간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줄어든다면, (비록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계층별 소득분배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가구별 소득분배지표가 주로 어떤 정책적 요인에 의해 개선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소득 지니계수에 대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개선 정도,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요한 결정요인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이 3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10% 초반대에 불과한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⁴⁾ <표 3>의 회귀분석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는 사회복지지출 규모인 반면에 조세부담률 변동도 일부 기여한다. 요컨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사회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실업률 및 실업률 변동 지표는 설명력이 없었다.

4) 국민계정으로 볼 때에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장소득 기준인 가계본원소득뿐만 아니라, 세금과 이전소득을 감안한 가계순처분가능소득, 그리고 현물이전까지 포함시킨 가계순조정처분가능소득(= 가계본원소득 + 순이전소득(소득/부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 등) + 사회적현물이전)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한국 가계의 처분가능한 소득은 창출한 부가가치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3〉 지니계수 개선율의 결정요인(1990~2016년)

	I	II	III	IV	V
상수	-0.417 (0.644)	-0.684 (0.668)	-0.469* (0.252)	-0.214 (0.244)	-0.525** (0.232)
지니계수 개선율(-1)	-	-	0.778*** (0.080)	1.092*** (0.046)	0.799*** (0.079)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1.051*** (0.105)	1.084*** (0.106)	0.334*** (0.065)	-	0.321*** (0.066)
△ 조세부담률	-	0.309 (0.215)	-	0.439** (0.214)	0.413** (0.196)
R ²	0.894	0.905	0.965	0.962	0.972

주: 괄호 안은 Newey-West 표준오차.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

IV. 맺음말

분배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분배를 소홀히 하면서 지속성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저성장 시대의 불평등은 위험하다. 성장을 제약하기 이전의 문제로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민주적 질서를 파괴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밀과 피케티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는다.

“..... 부의 분배란 사회의 법과 관습에 의존한다. 분배를 결정하는 규칙은 공동체를 주도하는 일부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정하기 나름이다. 따라서 시대와 나라에 따라 많이 다르고, 미래에도 인류가 선택하기만 하면 더욱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 원리: 제2편』, 박동천 역, pp.19~21)

“.....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어떤 경제적 결정론도 경계해야 한다.....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힘이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은 없다.....” (피케티,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역, pp.32~33) **KLI**

[참고문헌]

- 밀, 존 스튜어트(2010), 『정치경제학원리: 제2편』, 박동천 역, 나남.
- 이상현·주상영(2016),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수요주도성장』,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 전수민·주상영(2016), 「한국의 기능적 분배와 총수요: 단일방정식 접근」, 『사회경제평론』 51, pp.1~25.
- 주상영(2013),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19(2), pp.151~182.
- _____ (2017),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여건 분석 및 정책적 논의」, 『예산정책연구』 6(2), pp.117~149.
- _____ (2018), 「소득주도성장의 이해와 과제」,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 주상영·전수민(2014),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사회경제평론』 43, pp.31~65.
- 피케티(2014),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역, 글항아리.
- 홍장표(201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20(2), pp.67~97.